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결심하면 빠른 시간에 핵실험 가능”

2025 국정감사

국방정보본부 北 군사동향 보고
北, 핵 능력 고도화·확장 지속
ICBM, 1.3만km 비행능력 확보
개성공단 일부 건물 철거 진행

국방정보본부가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심하면 단기간 내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박선원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와 이성권 야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중 기자들과 만나 국방정보본부로부터 보고 받은 북 군사 동향을 설명했다.

박선원 간사는 “북 핵미사일 동향과 관련,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 및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핵무력 보유와 발전은 2023년9월 헌법에 명문화하고 핵능력을 지속 시위하며 국제사회에 북의 핵능력을 암묵적으로 용인토록 유도하고 있다”며 “연변 등 우라늄 농축 시설의 확장 등 핵 물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박 간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심한다면 매우 빠른 시간에 풍계리 3번 강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위치해 있으며, 총 6회의 지하 핵 실험이 실시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강도를 폭파해 폐기하는 듯 보였으나, 이후 활동을 재개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박 간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비행

능력 1만3000km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실제 사거리로 고각발사만 했는데, 정상 각도로 발사하려고 핵심기술을 검증하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며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SLBM)은 1차로 핵 공격을 하고 상대국가로부터 핵 보복을 당하면 2차 핵 공격으로 보복하는 것을 뜻하는 ‘핵 이격 능력’ 확보를 위해 개량형 R급 잠수함의 전력화를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 등 수중 플랫폼도 개발 중에 있다”고 전했다.

박 간사는 “북한은 미국과의 대결 기초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침묵하며 몸값 불리기를 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회담을 기점으로 북중 관계의 전면적 발전 흐름이 감지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지난9월 중국의 대북 수출이 연간 기준 30% 증가했으며, 직전8월달과 비교해선 54%로 급증했다”고 보고 내용을 전달했다.

이성권 간사는 개성공단 일부 건물의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우리 정부의 자원과 기업의 노력으로 구축했던 개성공단이 적대적 두 국가론의 영향력 아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가 철거되고 있다”며 “작업이 2024년 12월18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15층 건물에서 11층까지 철거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만들었던 공단의 공장 일부는 북한이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이 간사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작업이 지속되고 있다”며 “2024년4월부터 군사분계선 인근 및 북한한계선 인근에 장애물 구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4월 일시 중단한 이후에 다시 6월25일에 유엔사에 작업 개시를 통보했고 6월27일에 작업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어 “작업 내용은 비무장지대(DMZ) 250km 이내에 도로로 표현할 수 있는 불모지를 구축하고, 철책을 3중으로 구축하고, 방벽을 구축해서 남북을 물리적으로 두 개로 나누는 적대적 두 국가의 모습을 구현하는 특징이 있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장동혁 “철강산업 일으키는 ‘K-스틸법’ 처리 최선”

충남 당진서 철강산업 간담회 참석
“산업용 전기료 급격한 인상 문제
중대재해법 등에 건설경기 얼어붙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충남 당진시에서 철강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로의 전환을 위한 ‘K-스틸법’을 당차원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당진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철강산업 위기 대응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여당과 국회가 정쟁에만 몰두할 뿐 민생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단연컨대, 민생보다 앞서는 정치는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무너져가는 철강산업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K-스틸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5일 세종시 금강 세종보사업소에 도착, 최민호 세종시장(오른쪽)과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을 온 당력을 모아서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고 수소환원제철 등 녹색철강기술 개발에 보조금이나 세제혜

택을 주는 내용으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장 대표는 “돌이켜보면 당진의 철강산업이 생겨나면서 충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 사실”이

라며 “그런데 지금 철강 산업이 위기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철강 산업의 위기는 당진을 넘어 충청의 위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산업용 전기료의 급격한 인상이 문제다. 예전에 우리가 전기료가 낮아서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며 “지금 전기요금이 미국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이 에너지 정책에 투영되면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에너지 정책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AI(인공지능) 고속도로 건설을 주장하는데, 전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철강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시멘트 산업에

서 제조원가 중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다. 전기료 부담은 모든 산업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데, 지금 에너지 정책을 그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거기에 더해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강행으로 건설경기가 얼어붙었고, 지방의 건설경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맞는 분석”이라며 “결국 철강업계가 그 침체의 직격탄을 또 맞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올해 철강 국내 소비량이 3개년 대비 15% 감소했다고 돼 있는데, 기업의 대미 투자가 늘게 되고 결국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이 늘어나게 된다면 국내 철강생산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말씀드린 것만 해도 삼중, 사중, 오중고가 예측되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에서 대책은 미흡한 듯하다”고 비판했다. /박태홍 기자

당정, 국정자원 화재복구 예산 200억 내외 증액

민주당, 행안부와 당정협의 열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1500억 편성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5일 당정협의를 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행안부 소관 사업·중점 추진 법안을 공유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당정협의 후 취재진과 만나 “각 부처에 편성된 DR(재해복구시스템) 예산을 행안부로 집중하고 긴급 복구하는 전산 장비 구축 비용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예산들을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롭

게 증액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전체적인 증액 규모는 200억원 내외다.

윤 의원은 “통상 노후 장비를 개선하는데 1584억원 정도가 잡혀있다. 하지만 지금도 관련 부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추계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며 “구체적 내용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 심사와 정에서 정부와 협의해 증액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정부의 색깔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을 예산 증액하자는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1조1500억원으로 편성한 것과 관련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특히 인구감소 지역,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에 대해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사회경제연대기본법 ▲주민 자치 근거를 두는 지방자치법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훈 위원장은 “중수정(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단순히 검찰 개혁 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행안부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기득권을 휘둘리지 말고 행안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민주당, 李 정부 외교성과 뒷받침 박차

민주당, APEC 성과 확산과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 특위 설치

더불어민주당이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설 특위 설치 구성의 건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위원장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임명됐다”며 “향후 위원이 조직되는 대로 별도 추가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을 국민 모두의 성과로 만들겠다”며 “한미, 한중 정상회담으로 막혀있던 외교와 경제의 통로 다시 열렸다. 산업, 무역, 공급망 등에서 협력의 새 틀을 만들며 미래성장 기반을 다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민주당은 오늘 구성된 당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정부가 만든 외교적 성과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 (한미 무역협상) 팩트시트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대미투자특별법을 11월 중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